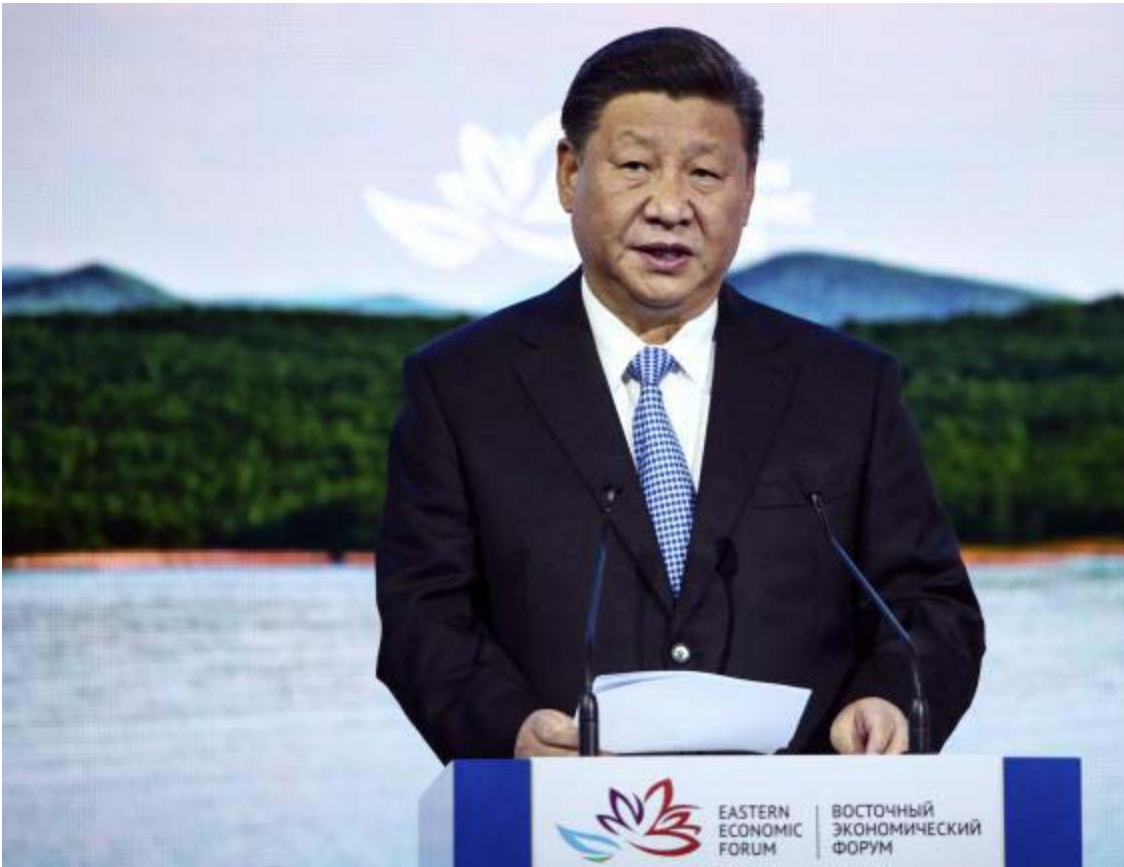


"다음 금융위기 온다면 부채 산적한 중국이 진원지"

2018-09-15 16:36



사진=연합뉴스

2007년 후 세계 부채 증가액 중 중국이 43% 차지중국 증시는 이미 약세장 진입

[헤럴드경제]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때로부터 꼭 10년이 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다음 금융위기가 온다면 부채 문제가 심각한 중국이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주하이빈 JP모건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채 문제가 '핵심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및 부채 규모, 방대한 국제 금융 연결망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부채 이벤트 돌출은 세계의 다른 곳으로 신속히 전이될 수 있다”며 “중국이 다음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미국,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외부충격에 대응해 무려 4조위안(65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 부양책으로 뚜렷한 경기후퇴 없이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급증한 중국의 부채는 중국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꾸준히 지목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를 중국이 차지했

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중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은 208.7%에 달해 2007년의 115.6%보다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유로존의 GDP 대비 민간 비금융 부문 부채 비율은 각각 152.2%, 159.7%였다.

이런 가운데 비은행권 대출 및 ‘그림자 금융’이 증가하면서 중국 부채의 질도 한층 나빠졌다는 평가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 펀드사, 개인 간 대출(P2P), 소형 대부업을 통한 우회성 대출이 급증했다.

물론 중국 정부도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에 초점을 둔 경제 정책을 펴나가면서 그림자 금융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나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중국 경제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전면화하면서 중국 당국은 디레버리징 강도를 조절하면서완화의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미세 조정’하는 중이다.

한편, 자본시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표들이 악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초 고점 대비 25% 추락하면서 폭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주에는 홍콩 증시마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악세장(베어 마켓)에 접어들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Herald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